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HUB) 확대 구축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이성은 서기관(02-2100-4155, pinetree@moi.go.kr)

□ 현 황

- 그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에서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정보열람서비스를 확대하여왔으며,
- 행정·공공기관 간의 정보 연계·공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시설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유통 서비스 발굴·제공 중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 중앙행정기관 등 700여개 정보이용기관 업무담당자
- 서비스 내용
 - (국민)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한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편의 제공
 - (업무처리담당자) 공동이용 구비서류 열람 및 정보유통을 통하여 효율성 및 업무처리 신속성 제고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주요정책 결정을 위해 공급자 중심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수혜자 중심의 정보공유로 발전시켜, 민원 및 내부 행정업무 처리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정보유통허브(HUB) 구축
- 사업예산 : 3,376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 사업기간 : 7~8개월(변동 가능)

□ 주요 사업 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구축사업
 - 민원신청시 구비서류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비서류 열람정보 확대 (정보조회서비스 20종 열람방식 개선 및 대상정보 5종 확대)
 - 기관간 정보유통서비스 대상정보 확대 60종 등
- 차세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BPR/ISP
 -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공동이용 정보화전략 및 구축방안 및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기대효과

- 구비서류 온라인 유통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민원 프로세스 개선, 구비서류 감축 및 저탄소 환경 구현
- ('17년 10월기준) 행정·공공·금융기관 등의 민원사무 구비서류 열람 21백만건, 내부사무 33백만건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2,706억원, 탄소저감 107천톤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발주방식	장비 내역		수 량
통합발주	H/W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금융 연계서버	4대
		백본스위치	2대
	S/W	WAS 업그레이드	1식
		문서DRM 업그레이드	1식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27,729	12,610	1,743	3,376	-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공통기반시스템 운영환경 구조진단 및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행정안전부 지역정보지원과 유은희 사무관(02-2100-3923, euny1004@korea.kr)

□ 현황

- 공통기반시스템*은 시도·서울 행정, 주민등록, 부동산거래 등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단일 응용 프로그램(AP)을 운영하는 기반 환경이며,
 - * 시도·서울, 주민등록, 국가주소정보, 세외수입, 지방세, 부동산거래, 건축행정 등 9개
 - 일 평균 22만 건(연간 8,100여 만 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는 핵심 지방행정 시스템임
 - 공통기반시스템의 모든 AP는 단일 플랫폼*에서 서비스
 - * HW 및 OS, WEB, WAS, DBMS 등의 시스템 SW 공동 활용
- 장비 및 시스템 SW의 노후화와 서비스 지원 중단
 - 공통기반 운영환경인 HW 및 시스템 SW는 단종*되거나 기술지원 중지로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노후화된 버전임
 - * 공통기반II (IBM P570, P590)는 '08.8월 생산 및 서버 증설을 위한 CPU 등 부품 판매 중단
 - 공통기반 서버의 노후대개체 시에도 응용 프로그램(AP) 영향 최소화를 위해 JDK 등 시스템 SW를 단종된 버전으로 다운 그레이드* 하여 사용
 - * JDK 1.4.2 사용을 위해 HW에서 지원하는 최하위 버전 OS 설치 등

□ 서비스 주요 내용

- 시도·서울행정시스템 업무현황 (17.9.30.기준)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 광역자치단체 행정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시스템
 - ※ 16개 시도 8만5천여명 공무원(세종시는 서울사용), 22개 업무, 366개 단위업무
 - 서울행정시스템 : 시군구 행정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시스템
 - ※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228개 시군구 21만여명 공무원, 22개 업무, 709개 단위업무
-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245개 지자체 30만 공무원이 사용하는 인사시스템으로 '05년 신규 개발하여 현재까지 12년간 운영 중
 - * 임용계획, 시험관리, 임용관리, 평정관리, 교육학습, 급여관리, 상시모니터링, 통계
 - * 인사관리 : 조직 및 정원관리, 인사기록관리, 호봉관리, 상훈 및 징계관리, 맞춤형복지, 인사교류, 총액인건비 관리
 - * 복무시스템 : 시도·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복무기능 서비스 및 개인근무상황 관리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국민(주민)이 중단없이 언제 어디서라도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 ※ 단종 및 기술지원 중단 등 노후화된 기술 개선과 성능보장으로 대국민 서비스 이용 편리성 향상
-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절감
- 서비스(운영) 안정성 확보 및 장애 발생 시 대응시간 최소화

○ 사업예산 : 1,330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정보지원과

○ 사업기간 : 7개월

□ 주요 사업 내용

- 공통기반시스템 운영환경 개선방안 및 전환 가이드 수립
 - 시스템 운영 환경의 부분적 변경 및 시스템 SW 업그레이드 불가, 기능 제한 및 성능 저하 등 현행 문제점을 해결하는 개선 방안 수립
 - 운영환경 및 플랫폼 구조 설계에 따른 하드웨어 및 시스템 SW 용량(cpu, memory, 라이선스 등)·규모 산정 가이드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 및 효과분석 등
- 운영환경 개선을 반영한 시도·새울 행정 재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 기능 개선, 시도 행정 및 새울 행정 통합 등 데이터·서비스 요건 정의
- 운영환경 개선을 반영한 지방인사 재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 시스템 현황분석 및 방향성 도출, 업무프로세스 및 기능 요건 정의

□ 기대효과

- 특정 OS, 브라우저, Active-X, 프레임워크 등에 종속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민원서비스 확대구축 용이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
- 공통기반시스템 노후대개체 시 약 2,461억원, 10년 유지관리 시 약 1,407억원, 표준지방인사 운영비용 113억원 예산절감
- 공통기반 시스템 장애 조치 및 예방, 성능 등 관리 효율성 향상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1,330	0	0	1,330	-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 현 황

- 주민등록(자료제공, 인구통계, 원장조회, 선거 실명확인, 실명확인,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 등·초본 진위 확인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시스템, 인감시스템, 본인서명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 매년 법·제도 개정 등으로 AP 변경이 빈번히 발생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 소요되며, 개발언어(텔파이) 유지보수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워 전면 재개발 필요

* '02년~'15년 운영·유지보수 240억원, 시스템 변경 106억원 소요(구축비의 524%)

□ 서비스 주요내용

- (국민)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 등 통합 운영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
 -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발급
 - 전국 주요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3,650대)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 (기업) 고객의 신분확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금융권의 경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진본여부(주민등록번호, 사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ARS(1382)를 통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발급일자, 번호) 제공
- (정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연계 및 업무절차 개선
 - 실시간 정보연계 확대 및 지자체 업무용 프로그램 개선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 등 업무별로 별도 운영중인 노후시스템 통합 재구축을 위한 ISP 수립
- 사업예산 : 1,000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사업기간 : 7~8개월(변동가능)

□ 주요 사업 내용

- 업무시스템*에 대한 기능 진단 및 재설계
* 주민등록(중앙, 시군구), 인감, 본인서명확인, 인구통계시스템
-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35개 연계기관 시스템 연계 구조 재설계
- 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정보시스템 설계
- 모바일주민등록증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맞춘 정보시스템 설계
- 4차산업혁명 대비 신기술 이용 주요업무분야 시스템 기능개선 설계

□ 기대효과

- 시스템 진단 및 재설계를 통한 재구축 시 사안별 변경사업 축소, 운영 효율화 등으로 '19년부터 10년간 약 85억원 절감
- 시스템 연계 및 민원처리 개선 활성화로 국민공감 서비스 기반 확보
- 시스템 분석 및 통합을 통한 재구축으로 유지보수 및 운영효율 향상

□ 예산 현황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1,000(백만원)	0	0	1,000	-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이창석 사무관(02-2100-3976, ialcs@korea.kr)

최병훈 주무관(02-2100-3973, ethan@korea.kr)

□ 현 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09년부터 웹 기반 전자정부 서비스 기반으로 활용(조달발주 SW개발 중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사업 비율 : 52.2%)
 - 개발자가 필요한 공통기능을 활용해 직접 개발해야 하는 형태로 제공되어, 다양한 최신 기술(지능정보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한 부담 가중
- 지능정보기술(IoT·빅데이터·AI)을 활용 공공사업('15년 34개→'16년 56개)
 - 지능정보기술을 체계적으로 정의하여 제공하는 표준화된 플랫폼 부재로 공통기능 중복개발에 따른 예산낭비와 상호운용성 결여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 클라우드, IoT, 빅데이터, AI 기능 활용을 위해 전자정부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축되는 정보시스템(18,434개)
 - 정보화담당자(6,440명) 및 공공정보시스템 개발자(약 12만명)
- (서비스 내용)
 - 전자정부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개발자·사업담당자 등)를 연결하는 통합서비스 창구(전자정부 플랫폼 포털) 제공
 - 지능정보기술과 공동활용 가능한 전자정부 정보자원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조립·연계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공공·민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등록·연계·유통·관리기능 제공
 -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지원, 정보자원(인프라, 공통SW, 서비스 등) 관리 및 통합 모니터링 기능 등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엔진 제공
 -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자원들(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개별 구축 없이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차세대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현황 및 선진사례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미래지향적 목표모델 및 효율적인 구축계획 수립

○ 사업예산 : 1,800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 사업기간 : 7~8개월(변동가능)

□ 주요 사업 내용

- 전자정부 서비스 및 플랫폼 관리체계 현황분석
- 관리체계 목표모델 수립과 활성화 방안(법제도, 교육 및 변화관리) 수립
- 지능정보기술 및 공통기능·데이터·SW의 국내외 환경 및 현황분석
- 공통기능을 중복 개발하지 않고 제공 서비스를 쉽게 활용하도록 목표모델 및 구축·운영 계획 수립
-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례 및 현황분석
- 확장성과 호환성이 높은 개방형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전자정부 인프라와 연계하여 실행·개발·운영 환경을 통합적으로 제공

□ 기대효과

- ISP 수립('18년) 결과에 따라 구축('19년~'21년)될 전자정부 플랫폼을 공공정보화 사업에 적용하여, '20년~'24년까지 5년간 3,748억원 절감 예상
- 전자정부 및 공공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기반 신가치 창출 및 효율성 향상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 해당 없음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1,800	-	-	1,800	-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통신과 전용광 사무관(042-250-5730, junyk@korea.kr)

□ 현 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현재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일일 38TB, 총 7PB의 데이터를 수집·처리하여 보안 및 장애 관제 등 운영업무에 활용 중에 있음
- 하지만, 인력 및 시간제약으로 위험도 높은 중요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범위 확대, 속도향상 및 알려지지 않은 공격 등 사이버위협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서비스 주요 내용

- (국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입주기관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대응 서비스로 외부의 해킹 시도로부터 정부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각종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 (행정기관)
 - 각종 보안이벤트의 정·오탐 자동식별, 대응을 통한 처리범위 확대 및 대응속도 개선
 - 대국민 서비스의 정상이용기록을 바탕으로 비정상행위 탐지를 통한 신규위협대응능력 강화
 - 정부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각종정보 및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 강화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보안체계 구축
- 사업예산 : 7,300(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통신과
- 사업기간 : 8개월

□ 주요 사업 내용

○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 AI 데이터 수집, 전처리, 학습 및 탐지, 위협정보 저장소 및 관리시스템 등 인공지능 관련 시스템 구축

○ 보안 서비스 모델 개발(각 5%)

- 알려진 공격 서비스 모델 수립 : 공격 유형별 보안 서비스 모델 분류 및 탐지모델 개발
- 정상서비스 이용 모델: 정상 학습 모델 기반의 이상행위 탐지 모델 개발
- 신규 보안 기술 대응 방안 수립 : 신규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학습 모델 방안 제시

○ 위험도 판정 및 시각화

- 위험도 평가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맵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대응·분석 체계에서 신규 위협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고 사전 위협을 식별할 수 있는 예측·예방 능력 강화
- 공격패턴 중심의 대응체계(오용탐지)에서 정상행위 기반의 비정상행위 식별(이상탐지)체계 구현으로 알려지지 않은 공격이나 신규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발주방식	장비 내역		수 량
협상에 의한 계약	HW	인공지능 플랫폼, 시각화시스템 관련 서버	60식
		L3 / L4 스위치	각 6식
	SW	오픈소스 기술지원 및 관계형 DB	3식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8,218	0	918	7,300	-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과 승형배 사무관(02-2100-3989, hbseung@korea.kr)

□ 현 황

- 국민/행정서비스 제공시 전자정부서비스별 특징(보안성, 접근성 등)에 따라 인증수단의 적합한 적용, 이용권한 관리를 위해 인증통합 관리기준 등 방안 필요
 - ※ 전자정부 사이트별 인증관리 기준 마련 및 현행화, 현재 기관별 인증수단은 기준없이 다양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인 관리환경 부재
- 전자정부서비스가 다양화 됨에 따라 이용시 본인식별, 이용권한 등 인증을 위한 디지털ID 개선 등 디지털원패스 적용 추진
- 국민이 공감하는 공인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증절차 개선 필요

□ 서비스 주요 내용

- (대상1)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국민 및 정부/공공기관별 업무담당자
- (대상2)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서버, IoT기기 등
- 전자정부서비스별 인증관리제, 웹서비스 인증 강화, 다양한 인증정책 제공(전자정부 인증 프레임워크)을 통한 보안 강화기반 제공
 - 불필요한 인증체계 개선 및 다양한 인증수단 제공
 - 국제표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생체인증 공통기반 서비스 개선
 - 전자정부 인증서비스의 편리성 및 보안수준 강화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공인인증절차개선, 디지털원패스기능보강, 모바일인증,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 제공을 위한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제공 등
 - ※ 국정과제 8-5,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구현
- 사업예산 : 1,300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과
- 사업기간 : 7개월

□ 주요 사업 내용

- 공공분야 대국민 웹사이트 내 본인확인 등 불필요한 공인인증 절차 개선 지원
- 전자정부 생체인증 공통기반(G-FIDO) 보강 및 인증 방식 확대
- 디지털원패스 확대 및 기능 보강 등 전자정부 인증서비스 개선
- 서비스 안전성 확보 위한 인증 프레임워크 인프라 이중화 구성

□ 기대효과

-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을 직접 선택하고, 이를 통해 여러 전자정부 서비스를 반복인증 없이 간편하게 이용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증가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발주방식	장비 내역		수 량
분리발주	SW	키보드보안	1식
위임발주	SW	디지털원패스 WEB(인터넷망)	1식
		디지털원패스 WAS(인터넷망)	1식

※ 실제 발주 시에 일부 내역 변경 가능하며, 위임발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주 예정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3,344	1,000	1,044	1,300	-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문윤아사무관(02-2100-3428, yamoon@korea.kr)
 국가기록원 기록정보기반과 유영문연구관(042-481-6321, yuym4599@korea.kr)

□ 현황

- 세종시 이전 등 행정환경이 급변, 협업 기반 업무환경 구축 필요
 - 온-나라·기록관리(RMS)는 '05년 개발되어 Active-X를 사용하는 등 현재 기술 동향과 맞지 않고,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음
 - * (행안부) SW 유지·관리, (기관별)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관리 등
 - 현재 업무자료를 PC에 개인별로 저장, 사무실에서만 자료 접근 가능

-
- ◆ 온-나라, PC 업무 환경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공유·협업 기반의 업무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구현
 - ◆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여 공통 기능 공유·재활용하여 정부 공통업무(온-나라, RMS 등)의 생산성 및 자원 관리 효율화
-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공무원 (중앙·지자체·공공기관)
- (서비스 내용)
 - 중앙부처 업무관리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13개 기관)
 - 중앙부처 기록관리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27개 기관)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정부지식의 공유·활용을 통한 협업 환경 완성을 위해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부처 확산 완료
- 사업예산 : 4,740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기반과
- 사업기간 : 8개월

□ 주요 사업 내용

- 개방형 클라우드 업무관리(온-나라) 시스템 확산
 - 클라우드 기반 업무관리시스템 이용기관 확대(13개 기관)
 -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 운영관련 스토리지(1식) 증설
- 클라우드 기반 기록관리시스템(CRMS) 확대 추진
 - 클라우드 기반 기록관리시스템 통합 및 이용기관 확대(27개 기관)
 - 기록관리 클라우드 확장용 상용SW(클라우드 솔루션(RHEL 및 RHEV) 1식, 검색엔진·레포팅툴 각 2식) 구매 등

□ 기대효과

- 소통과 협업 기반의 투명한 행정실현과 4차 산업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기반의 전자정부 구현
- 클라우드 통합구축 및 공동 활용으로 개별 구축비 대비 60% 절감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발주방식	장비 내역		수량	비고 (단위:백만원)
조달발주	H/W	○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 확산관련 스토리지(280TB)	1	560
	S/W	○ 기록관리 클라우드(PaaS) 확장용 상용SW	1식 각 2식	197 86
		- 확장용 RHEL(2cpu, unlimit) 및 RHEV(HostOS포함)		
		- 확장용 검색엔진 및 레포팅툴		
	(소계)		283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30,018	16,404	8,874	4,740	-	-

※ '19년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이성은 서기관(02-2100-4155, nettouch@korea.kr)

□ 현 황

- 대부분의 서류를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제출하여 국민 부담 발생
- 개인·행정·공공·금융기관 등이 종이문서를 타 기관에 제출하거나 보관, 발급하면서 부담하는 각종 비용절감 및 불편해소 필요
- 민원이 민원신청에서 민원처리결과 수신까지 '온라인 완결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국민·기업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행정·공공기관)가 관계법령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필요

□ 서비스 주요 내용

- (국민)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시간낭비 및 비용지출 감소
- (기업)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민원을 발급·제출·수신하므로 종이문서 관리비용 절감 및 시간·비용 절감
- (정부) 국민편의 제공, 위·변조 방지, 종이 증명서 발급의 감축으로 행정·공공·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정부가 증명서 등 민원문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함으로써 종이문서 발급·유통에 따른 국민불편, 사회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 국정과제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국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

- 사업예산 : 1,000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 사업기간 : 7개월

□ 주요 사업 내용

- 개인·행정·공공·민간기관 등 범 정부 차원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문서를 발급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전자문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
- 유통되는 종이증명서의 감축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유통 수요에 대한 현황 분석
- 서비스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사항을 분석하고 개선안 수립
- 전자정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블록체인, 모바일OTP 등)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적용방안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중인 민간분야 증명서 전자증명유통 서비스 사업과 협업하여 국민중심의 더 편리한 미래모델 마련 및 이행계획 수립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
1,000	-	-	1,000	-	-

※ '19년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 권명철 사무관(02-2100-3908, mchkwon5@korea.kr)

□ 현황 및 추진배경

- 국민일상과 사회전반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화’로 대변되는 첨단 신기술 활용이 내재화·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전자정부 방향 전환 필요
- 국민의 의식성장, 개인별 다양한 요구, 공공서비스의 고도화 및 다양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행정서비스 재설계 요구 증대
- 기존의 온라인 위주 서비스 구현을 넘어서, 실생활에 맞닿아있는 세세한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어디서나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정부로의 도약 필요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국민, 공무원)
- (서비스 내용)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

※ ‘18년에는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지능형 전자정부 현황분석 및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제공방안을 수립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첨단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중심의 새로운 디지털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 사업예산 : 총 2,500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
- 사업기간 : 8개월

□ 주요 사업 내용

- 지능형 전자정부로의 재설계를 위한 종합적인 전자정부 현황분석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전자정부의 정보화 현황·문제점 분석,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이행계획 수립, 법제도·거버넌스 등 관련 기반의 대응방안 마련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분야 우선 추진과제의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 사용자의 주변상황과 이용패턴 등을 분석하여 알아서 개인별 니즈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해결(push)해주는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설계
 - 생애주기, 일상주기, 주변상황별 대국민 서비스를 유형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수요를 사전에 예측·제공하며, 필요 시 민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연계하여 공공·민간의 경계 없이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
 - 내·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비전 및 달성목표 수립, 목표모델 설계, 이행계획 수립(소요자원, 예산, 기대효과, 기능 도출 등)

□ 기대효과

- 생애주기별, 일상 틈새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능동적·입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공공 서비스를 다양한 채널로 국민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부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대국민 편의성 강화
- 공공분야 과제에 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산업 활성화 및 민·관 협업체계 강화에 기여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 ISP 사업으로 해당 없음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요구안)	'20년
2,500	-	-	2,500	-	-

※ '19년 이후 예산은 '18년도 ISP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김태범 사무관(044-200-7262, tbkim15@korea.kr)

민원정보분석과 손이규 주무관(044-200-7287, yiky@korea.kr)

□ 현 황

- 정부 내 산재된 민원·제안·정책참여 관련 시스템을 통합·연계 하여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 제공('05년~)

【국민신문고 이용현황】

(단위: 건)

구 분	'08	'15	'16	'17	
통합·연계기관	483	900	910	934	
업무 처리	민원	1,689,785	1,903,019	2,307,198	3,103,044
	제안	118,446	103,408	88,730	81,590
	정책참여	2,869	3,870	3,642	2,484
	국민생각함			562	2,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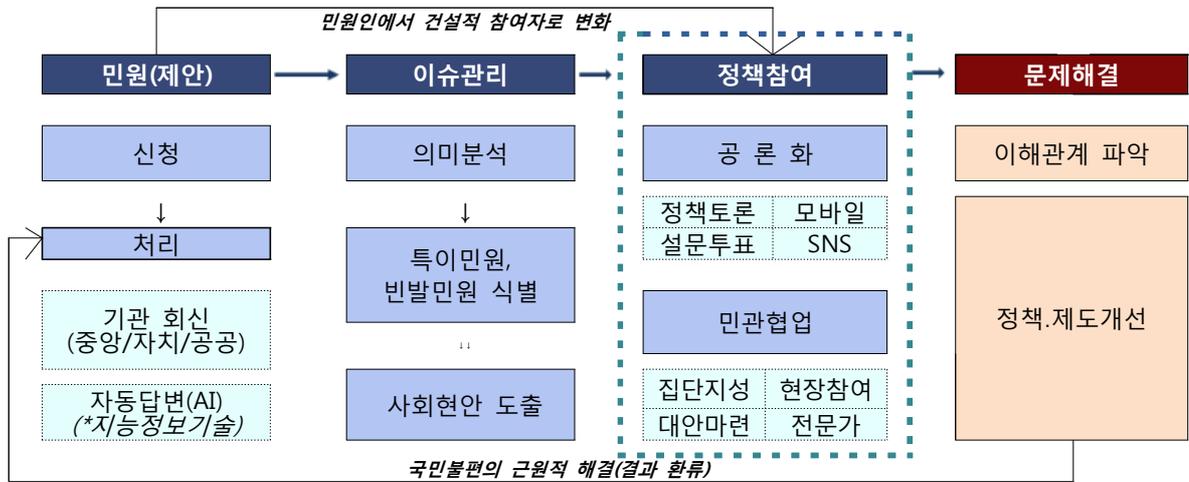
- 국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에 따라 민원서비스를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범정부 참여 플랫폼 구축 필요
 - 그간의 민원행정은 개별민원의 처리에 집중되어, 빈발민원 등으로 표출되는 국민불편*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시스템적 지원은 미흡
 - * 교통체계 불합리, 신도시 학교 부족 등 정책·제도개선이 필요한 민원
 - 국민 개개인이 쉽게 참여하고, 정책반영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실질적 소통창구 부재
 - 시스템 노후화로 서비스 품질 유지에 한계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 일반 국민, 업무담당 공무원(12만3천명)
- 서비스 내용
 - (국민) 민원·제안·참여 관련 원-스톱서비스(신청, 결과조회 등)
 - (공무원) 민원·제안·참여 관련 업무처리, 다부처 협업 지원 등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문제해결형 원-스톱서비스 제공



- 사업예산 : 39.1억
- 주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민원정보분석과
- 사업기간 : 8개월(장기계속계약검토)

□ 주요 사업 내용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민원분석체계 강화(분석/설계)
 - 민원과 다양한 매체정보(행정·공공기관 보유정보, 언론, SNS 등)를 연계한 분석 체계 구축
 - 민원내용에 따른 의미기반 분석을 통해 빈발민원 등으로 표출되는 사회현안의 조기 도출과 대응체계 마련
- 참여플랫폼 강화(분석/설계)
 - 유사 서비스인 국민신문고 정책참여와 국민생각함 서비스 통합
 - 각급기관 참여채널(홈페이지, SNS)과 연계 기능* 강화
 - * Open Api 제공, 기관별.참여자별 별도 페이지 생성 등
 - 찬반토론·설문조사·공감표시·현장투표 등 온·오프라인 참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 수단 제공
 -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복합의제 관리, 기관별·안전별 전문가 관리 및 참여지원, 토론결과의 이행관리 등 업무시스템 구축

- 국민신문고 업무시스템* 전면 개편(분석/설계)
 - * 민원, 고충민원,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예산낭비신고, 제도개선 등
 - BPR/ISP 결과를 토대로 민원 등 주요 업무시스템 기능 재설계
 - 국민신문고 운영평가(민원, 제안, 정책참여) 지원 시스템 도입
 - 데이터모델 재설계 및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연계체계 재정비(분석/설계)
 - 각급 기관 업무시스템과의 연계방식 표준화
 - 국민신문고 통합기관 홈페이지 연계방식을 Open-Api 기반으로 개편
- 컨설팅
 - 민원 분석결과 품질제고 방안 및 최신 빅데이터 분석기법 적용 방안
 - 참여활성화 지원을 위한 개인화서비스 및 참여절차 개선 방안
 - 각급 기관 챗봇서비스와 국민신문고 연계 방안

□ 기대효과

- 민원으로 표출되는 국민 요구를 조기에 파악하고, 제도개선이나 공론화 등을 통한 대안 제시로 정부신뢰도 제고
- 국민과 정부가 함께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는 성숙한 참여문화와 실질적 소통 환경 조성
- 대국민서비스 개선 및 업무효율화로 연간 218억원의 비용 절감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 해당 없음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4,364	(450, 자체)	0	3,914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11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5차)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 금석윤 사무관(044-205-5235,, safegsy@korea.kr)

기상청 기후과학국 이상기후팀 오태석 사무관(02-2181-0462, taesuk@korea.kr)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 황병철 사무관(031-210-2670, pchwang@korea.kr)

□ 현 황

- 우리나라 수문기상 관련 재해는 지난 10년간 전체 재해 중 90% 차지, 재해에 따른 피해복구 비용 약 15조(행정안전부, '16년 재해연보)
- 연계·공유·통합·등 관련기관 생산정보 연계활용을 통해 재난에 대비
 - 연계업무(기능) : 3개 부처(행정안전부, 기상청, 국토지리정보원), 유역단위 수문기상예측정보, 피해위험예측정보, 고정밀 공간정보 등 연계 활용
 - ISP 수립('13년), 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영산강권('14~17년)까지 전국 확대 구축 및 정보제공(행정전산망)을 통해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 서비스 주요 내용

- (중앙부처) 부처·기관별 물관련 재난안전 공동대응체계 마련
- (지자체) 호우 피해위험 사전예측 및 예방능력 강화
- (유관기관) 물관리 능력(홍수, 가뭄 등) 강화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재난의 대형화, 다양화로 수문기상 관련 재해를 사전 예측·분석, 예방대책 수립 등 선제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

- 사업예산 : 2,160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기상청 이상기후팀,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
- 사업기간 : 8개월

□ 주요 사업 내용

-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 기능개선 및 신규개발
 - 지형 및 토지피복을 고려한 호우지수(유역별) 개선, 기상멀티모델 앙상블 최적화
 - 유역 호우지수 평가체계 및 지형효과를 반영한 예측정보 평가지수 산정
 - 기상상황 모니터링, 정보제공 및 연계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OpenAPI
- 공간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기능개발
 -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표출 성능 고도화
 - 2차원 지도 서비스 개선(바로맵 OpenAPI활용)
 -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 연계(SSO)에 따른 사용자 관리 강화
- 풍수해 피해예측 시스템 기능개발
 - 재난통계기반 재해원인별(태풍, 강풍, 풍랑, 대설 등) 피해예측 기능 확대 개발
 - 풍수해 예방사업 경제성 분석능력 강화
 - 호우 피해예측 기반 피해발생 후 단가내 피해규모 산정 및 의사결정 지원기능 개선
 - 피해지역 피해액 산정 종합관리기능 보강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발주방식	장비 내역		수 량
위임발주	H/W	대용량 공간정보의 확장성을 고려한 NAS 스토리지	1식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 자료 저장용 스토리지	1식

□ 예산 현황(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28,169	18,279	7,730	2,160	-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실 김관우 사무관(02-3480-1847, kgw386@scour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김종필 사무관(044-201-3412, jpkim01@korea.kr)

□ 현 황

-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또는 업무처리가 필요하며, 여전히 종이 중심의 행정처리 및 업무 간 단절
- 부동산에 관한 사고나 분쟁이 매년 발생하며, 미연에 방지 필요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당사자 및 이를 지원하는 공인중개사,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 (서비스 내용)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 시 필요한 계약부터 세금납부, 등기까지 모든 업무를 국민 수요자 관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 부동산거래 위험요소를 한눈에 체크 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요약
 - 세금납부 및 등기신청 등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통합전자등기시스템
 - 계약서 작성 및 전자서명, 거래정보 암호화, 위법 중개행위 방지, 확정일자 신청 및 실거래 자동신고 등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서비스 제공
 - 거래통계 정보 등을 활용한 부동산 정책 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 개요('18년)

- 추진목적 : 국민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권리를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사법부와 행정부가 협력하여 국민 수요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기반 구축

※ 국정과제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스마트한 정부행정)

- 사업예산 : 3,635백만원
- 주관기관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사업기간 : 7.5개월

□ 주요 사업 내용

- 통합전자등기시스템 기능 확대
 - 인터넷등기소 제공서비스 확대 등 업무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레임워크로 재구축 완료
 - 등기신청 사건의 전자적 사건관리의 편의성 향상
 - 모바일 앱, 푸시(PUSH) 등 다양한 알림 및 의견제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오프라인 방문 없이 적시 업무처리 및 진행상황 확인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기능 고도화
 - 민간 부동산 매물정보시스템 연계(공인중개사협회 '한방' 등 연계를 통해 민간 매물정보시스템과 전자계약시스템 연계 및 표준화 모델 구성)
 - 임대차계약 등록·신고시스템 연계(임대등록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 전자계약 체결시 임대차 신고 서비스)
 - 계약방식 다양화(공매, 지역개발공사 등 연계 기관·유형 확대)
-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강화
 - 부동산 플랫폼 연계형 시스템 구축(민간부문 대량 계약정보 데이터 연계 표준화 등)
 - 계약서 작성 및 조회 기능 개선(부동산 관련 공부 통합서비스 제공, 계약서 진위확인서비스 고도화, 전자계약 e-러닝 개발 등)
- 전자계약 통계 분석 및 현황관리시스템 구축
 - 기관별 관리대상 현황에 대해 다양한 데이터 통계 제공(거래동향 등 통계분석,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현황 조회시스템 구축 등)

□ 기대효과

- 종이없는(paperless) 전자계약 체결, 연관업무 자동처리 및 신청서류 간소화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및 세수 증가
- 부동산과 ICT를 등기·세무·금융 등 타 산업과 접목하여 새로운 융합효과를 창출하고 사회현안을 해결

- 서비스간 연계통합 강화로 일선현장의 민원처리 효율성 확보 및 대국민서비스 품질 향상
- * (효과) 온라인 네트워크 연계로 실거래 및 확정일자 자동처리, 민원 첨부서류 생략, 무자격·무등록 위법행위 차단, 등기수수료 절감, 대출금리 우대 등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발주방식	장비 내역		수 량
통합발주	SW	ESB (agent 포함)	1식
		모바일 앱 위변조방지 보안솔루션	2식
		비대면영상통화솔루션	1식
		모바일 키보드 보안	4식
	HW	연계서버	2식
		시스템SW 운영서버	2식
		시스템SW 운영DB서버	1식
		비대면영상통화 메인서버	1식
		비대면영상통화 MPS 서버	1식
		VPN	2식
분리발주 (쇼핑몰포함)	웹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모니터링 솔루션		1식
	서버자원관리솔루션		1식
	백신SW		9식
	서버보안		6식

※ 실제 발주 시에 일부 내역 변경 가능하며, 위임발주는 통합전산센터에서 발주 예정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 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16,534	5,288	7,611	3,635		-

※ '19년 이후 연도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예정

□ 현 황

- 해외의 재외국민이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서 수차례 재외공관 방문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불편함 초래
- 민원 접수 대장 수준의 영사민원시스템(e-Consul)과 실물 기반의 재외국민 민원문서 처리로 인한 행정 효율 저하
 - ※ '04년 구축된 e-Consul을 통해 병무, 재외국민관리, 공증, 민원, 사건사고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원문서 중 약 70% 이상이 수작업이 필요하며, 상당수가 외교행낭을 통해 발송·접수됨에 따라 업무 처리시간 지연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재외국민, 외교부 및 재외공관 민원업무 담당자
 - 재외국민, 해외여행객 및 해외조달정보, 안전정보 등이 필요한 우리 기업/국민, 재외공관 민원담당자, 법무부 등 연계부서 공무원
- (서비스 내용) 인터넷을 통한 민원 신청으로 재외공관 방문 최소화, 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재외국민에게 편의성 제공
 - 온라인 민원 접수 및 예약, 민원처리 현황 알림 및 민원 정보(안내) 등 재외국민 민원포털 서비스 제공
 - ※ 가족관계, 병무 행정, 재외국민 관리, 공증 민원, 영사 접견 등에 업무에 대해 전자적 민원서식 기반 온라인 민원신청 및 진행확인, 민원 신청 방법/절차/처리기간 안내, 샘플 양식 등을 제공
 - 재외국민, 공증, 가족관계, 병역, 국적 등 각종 민원처리, 증명서 발급, 전자문서관리 등 통합적 행정·민원 업무 처리 지원
 - 본부-거점공관-단말공관의 서버 연계로 무중단 서비스 제공, 데스크톱 가상화(VDI)를 통한 여권/사증/민원시스템 등의 효율적 운영 환경 제공, 실시간 행정 정보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연계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편리한 영사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전자행정 시스템(G4K) 구축
- 사업예산 : 8,485백만원
- 주관기관 : 외교부 정보화담당관실
- 사업기간 : 8개월

□ 주요 사업 내용

- 온라인 민원 접수를 위한 재외국민 민원 포털 구축
 - (온라인 민원 접수 및 현황 알림) 전자적 민원서식기반 온라인 민원신청 및 민원진행확인 시스템 구축
 - (행정 문서 발급 및 진위 확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해외이주신청서 등 인터넷 신청 및 발급, 발급 문서에 대해서 진위 확인 조회 서비스 제공
 - (편리한 웹서비스) 사용자 맞춤형 기능, 크로스 브라우징, 다국어 지원을 포함한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 환경 구축
- 통합적 업무 처리를 위한 영사민원 통합업무포털 구축
 - (업무 지원 서비스) 재외국민의 인터넷 신청 민원 처리를 위한 업무 지원 서비스 제공
 - (전자적 유통 체계) 공관과 본부, 본부와 관계기관, 본부와 민간기관과의 전자적인 문서 유통체계를 구축
 - (통합행정DB 구축) 여권이나 재외국민 관련 공통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내부 및 관계기관에 제공
- 관계기관 시스템 연계 및 재외공관 민원사무 인프라 구축
 - 관계 기관을 통한 민원 업무 처리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연계
 - ※ (내부 시스템) 여권시스템, e-Consul, 외교부홈페이지, 아포스티유시스템
 - (외부 시스템) 법무부(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국적시스템), 경찰청 (efine

시스템, 신원조회시스템),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주민등록 시스템, 정부24) 등

- (무중단 서비스 기반) 장애 발생 시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본부, 거점센터(2개), 재외공관(6개) 서버 구성 및 인프라 구축
- (데스크톱 가상화(VDI)) 개별적으로 구축된 여권시스템, 사증시스템, 민원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데스크톱 가상화

□ 기대효과

- 인터넷으로 민원 사전신청, 방문예약, 진행상태 확인으로 재외국민의 방문 최소화 및 민원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 개별 문서 단위 수작업 민원처리 체계를 관계기관과 연계된 정보 시스템으로 유통하여 체계적인 민원처리 환경 마련
- 민원서류 전자적 처리에 따른 문서생산량 감소 및 업무 처리시간 단축, 해외 민원 서류 번역 서비스를 통한 비용 부담 감소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 도입 H/W 품명

구분	품명	구분	품명
재외국민 민원포털	WEB서버	백업장치	국민백업
	WAS서버		업무백업
	DB서버		업무백업
	민간연계서버		센터백업
영사민원 통합업무포털	업무포털	가상화	가상데스크톱 서버
	문서관리	모니터링	본부운영
	DB서버		센터운영
	진본확인		PC
	관계기관·내부연계서버	민원실 환경	모니터
	문서변환		민원단말기
	개발·검증		여권인식기(MRP 장비)
업무포털	전자문서 스캐너		
거점센터	문서관리	민원실 환경	테블릿 패드
	DB서버		컬러 프린터
	연계서버		민원용 인터넷 PC
	업무포털		민원용 복합기
단말공관	DB서버	네트워크	L2 스위치
스토리지	디스크		L4 스위치

○ 도입 S/W 품명

구분	품명	구분	품명
웹 솔루션	WEB	보안솔루션	키보드보안
	WAS		화면캡처 SW
	eForm	가상화 솔루션	데스크탑 가상화 서버
	웹 리포팅		데스크탑 가상화Agent
문서전자화	문서관리 SW	운영솔루션	이중화 SW
	PDF 문서변환		백업관리
	진본확인 및 검증		통합로그관리
	위변조방지		서버관제
연계	연계 SW	DBMS	서버보안
	연계 Agent		DBMS
인증 솔루션	인증 Agent(SSO SW)	DBMS	DB 암호화
	웹구간 암호화 및 공인인증 솔루션		DB 접근제어
모니터링 솔루션	WAS 성능모니터링		
	DB 성능 모니터링		

※ 도입 H/W 및 S/W 내역은 사업 계획 수립 및 발주 과정에서 변동 가능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7년	'18년	'19년	'20년
8,485	-	8,485	-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예정

법무부 이민정보과 임준식 사무관(010-7657-1022, joonslim@korea.kr)

□ 현 황

- 테러, 국외 전염병 유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증가로 국민 안전을 위한 국경관리 강화 등 이민행정 업무 강화 필요
-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급증 등 기존 업무량의 폭발적인 증가 및 국적, 난민, 사회통합 등 새로운 업무 추가 등에 대응 방안 필요
- '17년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분석·설계 사업 추진에 따라 차세대 시스템 개발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전환 등 필요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 전국 46개 출입국기관 및 출입국관리공무원 약 2,100여명
 - 내·외국인 약 8,000만명 및 체류외국인 200만명 등 약 8,200만명 출입국자
 - 외교부, 행안부, 국토교통부 등 약 48개 외국인정보 연계기관
- (서비스 내용)
 -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심사 지원, 체류외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민원 적체 해소 등 다각적인 대민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 범법·위험 외국인의 바이오정보 등을 통한 정확한 신원확인, 탑승권 발권 차단 및 관계기관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수행 환경 개선
 - 전체 이민행정업무 절차에 대한 정밀한 분석, 변화·확대된 업무에 적합한 프로세스 설계, 정보시스템 통합 및 차세대 관리체계 도입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테러, 국외 전염병 유입 등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사전심사 확대, 감식·바이오정보 활용 등 출입국심사 개선을 통한 국경관리 강화

- 국적, 난민, 사회통합 등 급증하는 출입국·외국인 관리업무를 반영한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
- 사업예산 : 15,698백만원
- 주관기관 : 법무부 이민정보과
- 사업기간 : 7~8개월(변동가능)

□ 주요 사업 내용

- 선행 사업('17년)의 분석·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차세대 이민행정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이민행정 관련 연관시스템 개선
- 선행 사업('17년)의 분석·설계를 기반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데이터 전환
- 이민행정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출입국·외국인정보 연계 시스템 개선 및 표준연계체계 확대
-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인프라(HW, SW) 구축

□ 기대효과

- 출입국 절차 개선, 외국인 민원서비스 개선 등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을 통한 정량적 기대효과는 약 4,094억원으로 산정
- 국가 경제·안보·국민 안전 차원의 종합적인 외국인 관련 정책 실행기반 마련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출입국·체류외국인의 서비스 이용만족도 향상
- 최첨단 ICT기술을 활용, 사전 인지·예측 기반의 업무 수행 및 무중단·안정적 운영시스템 기반 마련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구분	장비내역		수량	구분	장비내역		수량
통합 발주	S W	미들웨어 연계 SW	1식	통합 발주	H W	통합이민행정 시험/개발 통합서버	1식
		DBMS (RAC)	1식			통합이민행정 서버(증설)	2식
		DB복제 모니터링	1식			비상&백업 스토리지	1식
		DB모니터링 솔루션	1식			SAN 스위치	3식
		백업 Agent	1식			동일인ID추출 서버	1식
		서버 OS백업 솔루션	1식			FIAS 분석 서버	1식
		SMS 솔루션(증설)	1식			FIAS 시각화 서버	1식
		통합DB 모델링 도구	1식			방화벽	2식
		연계 Agent	1식			웹 방화벽	2식
		이미지문서관리 솔루션	1식			백업 PTL	1식
		UI Tool	1식			서브시스템 공통DB 서버	2식
		위변조방지 솔루션	1식			시스템관리 DB서버	1식
		리포팅 툴	1식			서브시스템 공통WAS 서버	2식
		검색엔진	1식			서브시스템 공통WEB 서버	2식
		통합뷰어	1식			시스템관리 서버	2식
		이미지솔루션(Client)	1식			백업서버	1식
		SSO(내부망)	1식			비상심사 WEB/WAS 서버	1식
		FIAS 비정형통계 솔루션	1식			비상심사 DB 서버	1식
		DB암호화솔루션(증설)	1식			통합관리 서버	1식
		DB접근제어솔루션(증설)	1식			FIAS DB 서버	1식
서버백신(증설)	15식	행정정보수집 서버	1식				
분리 발주 (조달 쇼핑 몰 구매)	S W	WEB 솔루션	1식	비상심사 통합서버	1식		
		WAS 솔루션	1식	WORM DISK(증설)	2식		
		WAS 모니터링 솔루션	1식	서명패드	20식		
		키보드보안 솔루션	1식	L3스위치	6식		
		통합로그관리 솔루션	1식	L4스위치(내부연계)	2식		
		서버보안 솔루션	1식	L4스위치	6식		
		PKI툴킷	1식	백본스위치	2식		
		웹화면DRM 솔루션	2식	L2스위치	2식		
		파일 암호화	1식				

※ '18년 사업계획서 수립·확정시 일부 변동 가능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31,403	1,000	14,705	15,698	-	-

※ ISP 추진('15년) : 500백만원(자체 예산), BPR/ISMP 추진('16년) : 500백만원(자체 예산)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신동화 사무관(02-2100-4215, shindh03@korea.kr)

□ 현 황

-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단일창구에서 통합하여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한번에 가능하도록 제공
- 정부(공공기관 포함)의 서비스 정책이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고 있어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이의 해소 필요
- 기관별로 분산된 정부(민원)서비스·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 통합플랫폼 개통* ('17.7.26)
 - * 행정안전부 3개 시스템 통합 및 타 기관 22종 서비스 연계
 - ※ 민원24, 정부대표포털, 알려드림e 통합 / 소득확인증명, 건강보험자격, 국민연금자격변동 등 연계
- 2단계 1차 ('17.6.30~'18.3.27, 41억) 구축 중, '18년 4월 서비스 개시 예정
 - ※ 정부서비스(85종) 및 모바일서비스(271종), 정부의 정책정보(4개) 등 연계 확대

□ 서비스 주요 내용

- (정부서비스) 중앙·지자체 등 총 7만여건을 맞춤형·분야별*로 안내·제공
 - * 바로 받는 서비스 22종, '나의 생활정보' (가족/건강 등 42종), '생애주기별 서비스' (출산~노후 7종) 등
- (민원) 5천여종 안내, 1,459종 신청·발급, 이용률이 높은 418종 모바일 서비스
- (정책정보) 국민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책, 정부·지자체 기관정보 제공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하나의 창구에서 편하게 정부 서비스(민원)·정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통합·연계 추진
- 사업예산 : 5,028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 사업기간 : 7~8개월(변동가능)

□ 주요 사업 내용

- (정부서비스) 주요한 정부서비스 85종* 연계
 - 타 기관 개별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를 '정부24'로 연계
 - * 진료정보 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 학교생활기록부 발급(교육학술정보진흥원) 등
 - ※ (선정기준) 서비스 이용률, 서비스 완결성, 기관 참여도, 구현 용이성
 - ※ ('17년) 22종 → ('18년) 107종 → ('19년) 192종으로 확대
- (정책·정보) 주요한 정책포털 44개* 기관사이트 연계
 - 정부 정책·정보 제공 표준안에 따라 유용한 정책·정보 사이트를 연계
 - * 정부의 정책을 수립·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4개
 - ※ ('17년) 4종 → ('18년) 48종 → ('19년) 97종으로 확대
- (모바일 확대) 행정(민원) 업무의 모바일 서비스 확대
 - 모바일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 모바일 서비스 120종* 확대
 - * 미지급실업급여청구,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신청 등 민원사무 35종 포함
 - ※ ('17년) 620종 → ('18년) 740종 → ('19년) 875종으로 확대
- (편리한 인증) 생체인증(지문인식) 방식을 통한 로그인 편의제공
 - 생체인증(지문인식) 기능을 적용하여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그인 절차 간소화
 - ※ ID·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대체 인증, Secure PIN, PC(QR코드) 인증기능 제공
- (실시간 상담) 챗봇을 통한 대화형 상담 제공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10종에 대한 대화형 상담을 위한 시나리오 구축 및 대화형 채팅 상담기능 구현
 - 민원사무 5천여종, 바로받는 서비스 107종, 생활정보 42종에 대한 민원안내 서비스
 - 민원응대 정보, 바로받는 서비스 추가 85종에 대한 DB화 및 기계학습 기반으로 고도화 구현, 대화형 챗봇서비스를 위한 운영환경 구축
- (알림서비스) 모바일 앱 푸시서비스를 통한 이용자 편의확대
 - 수혜성서비스 및 유기한 민원처리에 대한 상태정보 알림서비스 시범추진
 - ※ 개별기관 알림 미 제공 서비스 중 알림효과가 큰 3종 적용

- (편의제공) 발급이 필요한 민원사무에 대한 모바일 출력 시범서비스
 - 정부24 민원서비스 중 개인정보가 없는 공시성 민원사무 중 이용량이 많은 2종* 모바일 출력 시범서비스 기능 구현
 - * 누구나 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으로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 ※ 현재 즉시발급가능 민원 54종 중 개인정보가 없는 공시성 민원 8종
- (생활정보 발굴) 국민체감형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확대
 -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발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
 - ※ (현재) 건강, 세금, 연금 등 8개 분야 42종 서비스 제공
- (바로납부) 나의 생활정보 內 세금, 과태료 등 바로납부 서비스 연계
 - 조회부터 납부까지 한곳에서 가능하도록 개별 납부시스템과 연계
 - ※ 위택스(행안부), 이파인(경찰청), 하이패스(도로공사) 등 3개 시스템
- (편의제공) 검색서비스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강화
 - 주소검색 DB 재정비 및 기능개선으로 지번주소 및 도로명 주소 검색의 편의성 제고
 - 통합 검색서비스 기능 강화, 개인화 서비스 제공 등 사용 편의성 제고
 - UI/UX 개편을 통한 사용자 위주의 화면 및 메뉴 구성

□ 기대효과

- 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 정부 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여 국민 이용 편리
 - 정부가 생산하는 주요 정책 및 정보자료를 실시간 반영 제공
- 챗봇을 활용한 상담서비스로 국민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 웹 및 모바일 기기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한번에 검색하고 즉시 접근 가능
- 간편인증 등으로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 생체인증 도입으로 인증절차 간소화
 - 모바일 프린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 가능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발주방식	장비 내역		수 량
분리발주	SW	통합설치 SW	4
위임발주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HW	생체인증, 챗봇, 푸시서버	4
	시스템SW	웹, WAS, 백업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10,028	0	5,000	5,028	-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정길용 사무관(042-724-7158, jky7506@korea.kr), 안도성 주무관(042-724-7485)

□ 현 황

- 5만 3천여 공공기관, 35만여 조달업체가 함께 이용하며 195개 기관과 연계를 통해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업무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범정부 공공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 (자체조달시스템과의 통합요구) 국회, 감사원은 개별 운영 중인 26개 자체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여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
 - * 26개 자체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외 전자입찰, 전자계약 기능을 가진 시스템 (시스템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이용환경이 상이하여 조달업체의 불편을 야기)

□ 서비스 주요 내용

- (통합 전자조달) 26개 자체조달시스템을 흡수·통합
 - 자체조달시스템을 아우르는 공공조달 표준 업무절차, 통합 환경을 제공하여 조달업체 불편을 해소, 시스템 중복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 (사용자 중심) 사용자 중심, 고객경험기반의 전자조달 서비스
 - 생체인증을 비롯한 인증수단 다양화, 설치 프로그램 제거, 검색 기능 강화
- (지능형 전자조달) 신기술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 유연한 자원 확장을 고려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설계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확보, 보안강화, 이용편의성 개선
- (하도급지킴이 개선) 노무비 직접지급 기능구현으로 임금체불 원천차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정보연계를 통한 이중입력 최소화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나라장터와 26개 자체조달시스템의 흡수·통합을 위한 법·제도·시스템 개선방안 및 최신 ICT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전자조달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하도급지킴이 개선

- 사업예산 : 2,671 백만원 (ISP수립 : 2,161, 하도급 고도화 : 510)
- 주관기관 :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 사업기간 : 7~8개월

□ 주요 사업 내용

- (사용자 편의성 강화)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이 강화 된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사용자 맞춤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 (자체조달시스템 흡수·통합) 통합 대상 기관의 법·제도와 특성을 고려한 공공조달 표준절차 수립 및 서비스, 시스템 통합방안 마련
- (기반기술 전면 재설계) 문서유통 등 나라장터 근간을 이루는 기반 구조를 향후 확장이 용이하도록 재설계, 시스템 통합 및 확장에 따른 데이터 구조의 재설계, 데이터 표준화 방안 마련
- (신기술 적용방안) 클라우드를 적용한 유연한 시스템 설계 방안 마련, 블록체인 등 시스템 보안 강화, 통합인증체계 마련
- (발주기관 노무비 직접지급) 발주기관이 약정계좌 통해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기대효과

- 자체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흡수·통합에 따라 조달업체 방문횟수 감소, 조달서류처리 감소, 정보화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 약 7천억 원 규모
- IT 신기술 적용, 고객경험 기반의 서비스, 빠르고 편리한 업무환경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사용자 만족도 향상
- 26개 자체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으로 중복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절감, 조달업체는 입찰 참여를 위한 시스템 접속 창구 및 사용방법 단일화로 이용 편의성 개선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여업체 94.6%가 자체조달시스템을 중복으로 이용)
- 전자정부 해외수출 선도, 전자조달 시스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하도급 지킴이 기능개선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2,671	0	0	2,671	-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원민정 사무관(010-3373-7524, wmj@spo.go.kr)

□ 현 황

- 범죄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른 지능형 수사체계 구축 요구 증대
- 사용자 기대수준 향상 및 법·제도 개정에 신속한 대응 필요
 - ※ 기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설계 후 12년, 구축 후 8년이 경과한 노후 시스템으로 기능개선에 한계

□ 서비스 주요 내용

- (국민)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현장업무 처리사건(교통사고)에 모바일 현장진술 서비스체계 구축
 - 참고인 편의를 위한 화상·모바일 영상조사 서비스체계 구축
- (행정기관) 최신 ICT기술 기반의 지능형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
 - 사건처리 전자화 확대, 지능형 범죄분석 등 과학적 수사지원
 -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서·결정문으로 단순 업무 경감, 수사에 집중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ICBM기반의 최신 지능형 정보 기술을 적용하여, 형사사법 업무 전반에 지능형 정보기술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재설계 및 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예산 : 2,322백만원
- 주관기관 :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법무부·검찰·경찰·해경)
- 사업기간 : 7개월

□ 주요 사업 내용

- 형사사법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 기관별 업무현황 및 대국민 서비스업무(민원)현황 분석
 -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시사점 도출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법무부, 검찰, 경찰, 법원이 각각 기관별로 구축, 운영하던 업무시스템을 연계, 표준화한 시스템으로, KICS를 통하여 약 400여종, 매일 약230만 건의 형사사법 정보를 공동활용하며,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건 조회 및 벌과금 조회 등의 통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 지능정보기술 적용 관점의 법·제도 개선원칙 및 개선방향 정립

○ 차세대 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 기존 시스템 현황분석(응용, 데이터, 연계현황 등)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정보공동활용 미래모델 설계
- 대국민 서비스 미래모델 설계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데이터 구성 및 정보관리 방안 수립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방안 수립

○ 통합 이행계획 수립

- 분야별 이행과제 도출, 단계별 구축 전략 및 추진체계 수립 등 통합 이행 로드맵 수립
- 소요예산 산정 및 기대효과 도출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분석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경제성, IT기술 적정성 등 타당성 분석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 기대효과

-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의한 신종 범죄, 지능화된 범죄 유형에 대해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과학수사로 수사역량 강화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서비스 개발로 형사사법정보 활용성을 향상, 시·공간 제약 없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 해당 없음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2,322	0	0	2,322	-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성관리추진단 이관석 사무관(02-2100-4494, kobold9@korea.kr)

□ 현 황

- 행정업무에 빈번히 활용되거나, 多기관에 걸친 업무절차 상 공통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의 기관(시스템) 개별적 수집으로 기준 불일치 및 행정오류 발생
- 기준데이터에 대한 제공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잡한 협의 절차, 관리기관 업무시스템 부하·비용 부담 등에 따라 데이터 제공 한계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기준데이터 관리기관 및 이용기관, 일반 국민
- (서비스 내용) 국가기준데이터 고품질 관리체계 및 제공기반 제공
 - (법정부 기준데이터 제공)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활용도가 높은 기준데이터에 대해 관리기관 중심의 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 데이터 제공
 - (고품질 데이터관리) 관리모델(기준, 프로세스 등), 표준체계, 품질관리 도구 등 고품질 데이터 관리체계 제공
 - (기준정보 단일배포 기반) 관리기관의 데이터 연계 대행, 이용기관에게 표준화된 데이터 이용환경 제공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빈번히 활용되는 기준데이터를 관리기관 중심의 체계적·고품질 관리, 데이터 제공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향상
- 사업예산 : 5,418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
- 사업기간 : 7.5개월

□ 주요 사업 내용

- 물품 및 자격·면허 국가기준데이터(고용노동부) 구축
 - 조달청 물품정보 및 자격면허정보(국가기술포털 515종, 지자체 면허 8종) 대상
 - 초기데이터 구축(수집, 품질점검·정제, 등록), 관리기능 구현

- 위험물(소방청) DB 구축 및 등록·조회 기능 구현
- 기관(국토부)의 기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국토부 국가기준데이터 대상(토지,건축물,자동차,시설물) 기관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기능 구축
- 국가기준데이터 관리 공통기능 구현
 - 사용자·관리자 포털(통합로그인, 조회 등), 공통 관리기능(모델표준, 품질관리, 프로세스 관리, 이력관리 등) 등
- '19년 구축 기준데이터(2종) 대상 컨설팅 수행
 - 종별 상세분석 및 마스터데이터 모델(식별체계, 기본·관리·결합속성 등) 설계

□ 기대효과

- 기관간 데이터 불일치 해소, 데이터 품질 향상 등을 통한 행정 오류 방지로 행정신뢰성 향상
- 고품질 기준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행정 구현
- 범부처 핵심 데이터인 기준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높은 사회현안 해결
- 지자체에서 민원 등 처리 시 기준데이터 확인을 통한 제출 서식 간소화로 민원인 불편 해소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발주방식	장비 내역		수량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위임발주	HW	국토부 메타관리 서버	1
		내부연계서버	1
통합발주		수집기관 연계서버	8
분리발주	SW(조달 소핑물)	DB S/W	1
	SW(분리발주)	국토부 메타관리 솔루션	1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 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7,418	-	2,000	5,418	-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행정안전부 전자기록관리과 남성운 연구관(042-481-1735, sungunam@korea.kr)

□ 현 황

- ICBM*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정부 업무에 도입·활용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전자기록관리체계가 요구
 -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모바일(Mobile)
- 생산시스템(온나라 등)과 기록관리시스템(RMS) 클라우드 전환·확산
- 또한, 전자문서 외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웹기록, 소셜미디어 기록, 대용량 영상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물 생산 급증
 - 공문서 전자기록 생산과 보존에 최적화된 현 전자기록관리체계를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로 확대·전환 시급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대국민
- (서비스 내용)
 - 공공기관 : 전자기록의 생산부터 보존까지 전 과정을 재설계 후 기록관리 서비스와 정보자원의 중복 및 운영 비효율성 개선
 - 대국민 : 소장중인 전자기록물을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를 추가 발굴, 기록정보 제공·활용 확대 및 국민들의 정책참여 활성화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정부업무 환경전환에 따른 현 전자기록관리체계 전면 재편
- 사업예산 : 683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전자기록관리과, 국가기록원
- 사업기간 : 6개월

□ 주요 사업 내용

- 전자기록관리체계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 정부업무환경의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전자기록물 관리대상 확대 등 전자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개념 재정립

- 개념 재정립에 따른 관리조직·업무분장·운영체계, 다양한 전자기록물의 식별·등록·분류·이관·보존·검증체계 등의 업무 재정비
- 지방영구기록관(광역지자체) 수요조사 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AM)의 기록관리를 위한 표준 기능 모델 설계 및 확산 전략 수립
- 중앙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및 기능 재설계
- 소장 기록물을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 과제 발굴, 최신 ICT 기술(인공지능, LOD 등)을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 활용·활성화 방안 마련
- 차세대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 재정립된 업무 절차에 따라 기록물관리시스템(RMS, CAMS)의 기능 재설계
 -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AMS) 구축을 위한 표준 SW의 기능 요건, 프로세스 설계, 표준 SW 보급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CAMS)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전환을 위한 아키텍처 설계, 단계별 이행계획 등 고도화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정성적 효과) 전자기록물 관리절차 개선으로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기록정보서비스의 지능화를 통해 기록의 관리·이용자 편의성 향상
- (정량적 효과) 기록물관리시스템의 표준 개발·보급(AMS) 및 클라우드 전환(CAMS)으로 구축·운영비 절감

*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AMS) 표준 개발·보급 : 241.5억 절감((15*16억(구축비)) 등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요구안)	'20년
683	0	0	683	-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박주언 사무관(02-2100-4333, jueon1119@korea.kr)

□ 현 황

-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 등으로 지방의 재정여건 악화 및 수도권·지방 간 재정격차 심화에 따라, 지자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답례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 ('17년 재정자립도) 전국평균 53.7%, 광역시·도 51.7%, 시 39.2%, 군 18.8%, 구 30.8%
-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및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지자체 요구 증대
 - * 전북도의회, 실효성 있는 고향기부제법 제정 촉구 건의('17.7.3)
 - 전남도의회, 고향세 도입 촉구('17.7.19.)
 - 충북도의회,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건의('17.8.4) 등
- 최근 '이영학 사건'으로 제기된 기부금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위해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도 및 시스템 운영·관리의 일원화 필요
 -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행정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 기부대상 지자체 및 기부금 사용분야 선택, 기부금 납부 등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기부자 편의 증진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기부자(국민) 및 업무 담당자(지자체), 중앙부처(정부)
- (서비스 내용)
 - (국민) 기부 관련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의성 제고
 - 지자체, 기부금 사용처 등의 카테고리 구성을 통한 선택 편의 도모
 - 지자체별 기부금 사용 현황, 실적 등 정보 확인 및 간편한 세액공제
 - (지자체) 기부금 접수, 홍보 등 기부금 관련 업무수행의 효율화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부금 사용처, 답례품 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 지자체별 기부자 및 기부금 이용실적 등 현황 및 통계과약 용이
 - (정부) 고향사랑 기부제도 및 시스템의 전반적 관리·운영 효율화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단계
 -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
- * 국정과제 75-4번(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고향사랑기부제 도입)
- 사업예산 : 500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 사업기간 : 5개월

□ 주요 사업 내용

- 관련기관 조사 및 정보·시스템 환경 분석, 해외 유사 시스템 분석
 - 중앙부처, 주요 지자체 등 연계 필요 정보 현황 조사·분석 및 인터뷰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및 시행령 초안 마련
- 시스템 연계·활용방안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및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협조사항 및 연계·활용방안 구체적 제시
 - 업무기능 정의, 시스템 기본구조 확립 및 효율적 아키텍처 제시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기대효과 및 발전방안 마련
 - 업무 프로세스 등 실제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상세 이행계획 수립
 - 경제적·기술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사업추진방식에 따른 대안분석 등

□ 기대효과

- (정량) 기부자 시간·비용 절감, 업무효율성 제고, 인력·예산 절감
- (정성) 국내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등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500	0	0	500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손두영 서기관(02-2100-3465, leanonme@korea.kr)

□ 현 황

-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이 의견 제시, 토론, 숙의 등 참여요구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정책참여 창구는 부족한 실정
- 또한 기존의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되어 채택된 경우에도 정책으로 발전되지 않고 사장되는 것이 현실
- 이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한 공모, 토론 등의 '공론의 장' 구축 추진 필요

□ 서비스 주요 내용

- **(일반국민)** 주요정책에 관련된 열린소통포럼 참여신청 및 청원, 재능기부 등 기관별 분산되어 제공하던 국민참여창구를 일원화
 - 열린소통포럼 인터넷 생중계를 국민이 시청하고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 제시(인터넷을 통해 오프라인 '공론의 장' 참여)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공론화하고 관심이 있는 국민에게 관련 이슈발생 시 알림(SMS, E-mail) 제공
- **(행정기관)** 기관별 국민참여창구를 연계하여 서비스 이용 확대
 - 전 부처와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적 공론의 장 구축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과제를 SMS, NEWS, Blog 등의 실시간 여론을 분석하여 관련 이슈 및 통계 제공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국민이 직접 정부와 함께 정책을 만드는 공론의 장 마련
- 사업예산 : 1,025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 사업기간 : 6개월

□ 주요 사업 내용

- 1단계 사업에 반영하지 못한 다양한 행정참여기제 추가
-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과 국내외 정책참여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의 협력을 촉진하는 국민참여형 플랫폼 구축
- 기존 민간호스팅 서비스의 ‘광화문1번가’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으로 이전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 기대효과

- 국민소통·참여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정부신뢰 제고 및 정책효과 향상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 미정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요구안)	'20년
1,025	0	0	1,025	-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과 남상우 사무관(02-2100-3761, proto93@korea.kr)

□ 현 황

- 1365자원봉사시스템은 모든 분야의 자원봉사를 온라인으로 검색, 신청 및 승인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자원봉사 시스템임
 - 자원봉사의 양적 확대에 축적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각 기관별로 자원봉사 수요-공급 연계와 실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
 -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서는 각각의 시스템에 회원가입과 별도의 연계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국민들의 불편이 큼

□ 서비스 주요 내용

-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봉사활동 맞춤 서비스 제공
- 타 기관 자원봉사 실적 연계·통합을 통한 자원봉사 실적 자동관리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개인의 자원봉사 실적의 다양한 참여관리 서비스 제공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 매칭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원봉사 참여율과 만족도를 제고하고 타 기관 자원봉사 실적을 연계·통합하여 국민편의성을 개선
 - ※ 국정과제 6-6. 자원봉사활성화(데이터 기반의 자원봉사 서비스 확대)
- 사업예산 : 398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과
- 사업기간 : 5개월

□ 주요 사업 내용

○ 자원봉사업무 관련 정보시스템의 범정부적 관리방안 제시

- 자원봉사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
- 자원봉사 관련 정보화 업무처리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정보화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자원봉사통합시스템을 구축위한 역할과 개선 방안 마련

○ 이용자 중심의 자원봉사시스템 서비스 고도화방안 마련

- 자원봉사 관련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 방안 마련
- 자원봉사 시스템의 누적데이터 분석 및 활용 모델 수립
- 빅데이터 기반 자원봉사활동 수요-공급 맞춤형 매칭 서비스 모델 도출

○ 모바일기기 확산 등 사용 환경변화에 따른 스마트 서비스 모델수립

- 자원봉사 채널 확대와 실시간 정보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모델 도출
- 스마트폰 앱과 IoT기술 등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 기록·인증 자동화 모델 도출
- 자원봉사 시간인증 이외 비정형 인증체계 서비스 모델 도출

○ 범정부 자원봉사 연계·통합을 위한 방안 수립

- 타 기관 실적정보 연계·통합을 위한 방안제시 및 통합 목표시스템 설계
- 기존 연계정보시스템 연계 프로세스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 기관 의견 수렴 및 실적 연계·통합 DB 구축 세부 이행계획 수립

○ 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계서비스 제공 모델 설계

- 자원봉사 통합데이터(자원봉사, 연계 데이터 등) 분석
- 자원봉사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통계 서비스 모델 도출

○ 자원봉사 서비스 선진사례 분석

- 자원봉사 온라인 서비스 활용사례 및 통합사례 분석, 시사점 도출

□ 예산 현황(백만원)

계	'18년	'19년(요구안)	'20년
398	398	-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고도화 BPR/ISP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이은영 주무관(02-2100-4118, eylee1117@korea.kr)

□ 현 황

- 주민이 직접 다수 주민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가 있으나 현장서명으로 인하여 제도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
- 자치입법 절차별 정보 역시 최종 단계를 거친 자치법규(폐지된 조례 포함 약 50만건) 및 입법예고, 행정규칙 등 일부 정보 외에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전 국민
- (서비스 내용) 자치입법활동의 전단계를 지원하여, 주민이 조례를 청구하고(전자적방식 주민참여조례시스템), 조례의 의결 진행사항을 확인(의안통합정보)하고, 의결된 최종내용(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쉽게 알 수 있는 주민자치입법활동의 전단계를 지원함
 - * 스마트 주민참여조례 : 지자체에서 접수된 청구내용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여 주민의 의견 표출이 직접참여 통로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함
 - * 의안통합정보 : 주민조례안 과 의원발의 내용등 지방의회에서 처리되는 의안정보를 쉽게 통합적으로 정보제공을 함
 -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각 지자체 자치법규정보를 통합하여 우리지역조례와 유사한 다른 지역 조례를 비교하여 볼 수 있는 정보제공 서비스

□ 사업 개요('18년)

- 추진목적 : 자치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전자민주주의 및 주민의 뜻이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
- 사업예산 : 총 536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 사업기간 : 6개월

□ 주요 사업 내용

- 주민참여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고도화 정보화 전략계획수립(ISP)
- 전자적방식 주민참여조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진단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BPR/ISP)
- 지방의회 의안정보 통합제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진단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BPR/ISP)

□ 기대효과

- 주민친화적인 지방자치 정착 및 주민자치를 위한 참여제도 확대에 기여
- 자치입법 정보 접근성 및 입법과정 투명성 강화
- 자치입법 업무 효율성 강화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 ISP사업으로 해당없음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536	0	0	536	-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전명주 사무관(02-770-7195, silkjeon@president.go.kr)

□ 현 황

-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국정과제 이행관리 및 정책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 관리를 통한 국정운영 효율성 및 정책품질 제고 필요
- 대통령 해외순방 등의 부재 상황에서 재가 등 극히 일부의 업무만 가능하여 국정운영의 공백 발생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중앙부처 및 대통령직속위원회
- (서비스 내용)
 - 주요 국정·정책 과제, 국정지표 모니터링·실적 및 문서보고·지시 등 국정 운영에 따른 정보교류 및 관리서비스 제공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국정과제 이행관리, 국정운영 업무의 효율성 및 정책품질 제고를 위한 국정관리체계 마련
- 사업예산 : 1,500백만원
- 주관기관 :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 사업기간 : 6개월(변동 가능)

□ 주요 사업 내용

- 대통령직속위원회 대상 업무관리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 대통령직속위원회 대상 업무관리 확산 및 기능 개선
 - 비서실의 국정과제 이행 및 정책관리 현황 통합관리 개발
- 모바일 업무환경구축 및 보안성 강화
 -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국정업무환경 구축

- 외부접속환경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차단, 정보탈취 방지 등을 위한 보안업무환경 구축
- 정보보호·보안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도입
- 업무관리시스템 정보연계 확대
 - 국정지표 관련 개별기관 주요 통계시스템 연계 확대

□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업무수행 및 처리 효율성 향상 (연간 약 25억 절감)
- (정성적 효과) 국정과제 목표수립부터 성과환류까지의 전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책품질 제고 및 범정부 차원의 목표지향적 과제관리 가능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 사업계획 수립 진행 중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4,500	0	3,000	1,500	-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홍원태 사무관(044-200-7143, honghwt@korea.kr)

□ 현 황

- 국정과제 2번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목표
 - 2-1번 선제적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과 국가차원 부패방지체계 강화
- 현 시스템은 2003년 구축되어 법·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추진에 한계, 부패방지 업무혁신과 선제적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필요
- 사업추진 현황 : ‘17년 BPR/ISP, ‘18년 1단계 구축사업 추진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대국민, 권익위 및 행정·공공기관 업무담당자
- (서비스 내용)
 - (국민) 부패방지 통합정보검색(상담사례, 신고사례, 의결례, 시책, 청렴도 등) 및 지식 사례를 기반으로 신고자 맞춤 서비스
 - (업무담당자) 부패방지 유형별 신고사건 처리절차 및 흐름관리 (신고중심, 신청, 보호, 보상), 부패영향평가 절차관리 및 입법지원 시스템 연계, 이첩·송부·고발 사건 접수확인 및 조사 후 이행관리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실현 지원
 - 유연한 구조 설계로 부패방지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지식기반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청렴포털 역할 수행
 -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자율적·능동적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사업예산 : 4,536백만원
- 주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 사업기간 : 8개월(변동가능)

□ 주요 사업 내용

- 국가청렴포털(NCP) 시스템 구축(1단계)
 - 부패방지 대국민 안내·교육 및 통합 사례검색(신고사례·상담사례·의결례 등) 등
- 위원회 부패방지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1단계)
 - 위원회 부패방지 업무처리 및 관리, 사건 현황관리(모니터링)
- 심의위원회 시스템 구축 (1단계)
 - 심의위원회(전원위, 분과위 등) 전자심의 운영 및 안전 상정·의결 등 관리
- 공공기관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1단계)
 - 위원회 연계업무(이첩 등) 처리 및 공공기관 부패방지 업무관리
- 부패관련 지식서비스 시스템 구축(1단계)
 - 부패방지 지식분류체계 설계, 지식사례 콘텐츠 개발 및 표준화

□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신고·접수, 안전상정에서 심의의결, 이의신청, 보호·보상 등 전 단계의 투명한 업무처리
 - ▶ 연간 업무생산성 증대 260억원, 처리기간 등 효과 23억원
- (정성적 효과) 부패방지관련 기관간 관련정보 및 정책연계 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발주방식	장비 내역		수량
통합발주	통합	Grid 솔루션, 개인정보 블랙마킹	2
분리발주	분리	한글편집기, 문서관리솔루션, 개인정보 비식별화, 모듈화/구조화지원도구	4
위임발주	센터	공개용 O/S(6), window OS(2), 공개용 DBMS, 공개용 WAS, 공개용 WEB(2), DB접근제어, GVPN, 서버백신(8), 서버보안(8)	9
조달쇼핑몰	쇼핑몰	공인인증(PKI), DB암호화(2), 리포팅 툴, PDF변환 솔루션, 검색솔루션, PDF Viewer	6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5,019	0	483	4,536	-	-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2017년 BPR/ISP)

□ 현 황

- 최근 세계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소유하는 대신 함께 공유·사용하는 협력적 소비에 기반한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음
 - ※ 세계 10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이상 신생벤처기업) 중 4개가 공유경제 기업으로, 우버(1위)의 기업가치는 620억\$, 에어비앤비(4위)는 293억\$('17.9. 비즈니스인사이드)
- 반면, 국내 공공부문(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은 다양한 공공자원(시설·물품·교육프로그램)을 기관별로 소유·운영하나 공휴일·업무량 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자원의 활용방안이 부족하여 사회적 낭비 초래
 - ※ 지자체는 단체장 관심도 등에 따라 개방자원의 종류·수 측면에서 서비스 편차가 크며, 대다수는 실시간 예약 시스템 미구축

□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 대국민, 공공부문 업무담당자
- (서비스 내용)
 - 공공부문에서 보유중인 공공자원에 관한 개방·공유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개별 서비스 중인 공유자원 및 민간 공유서비스 플랫폼 등이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과 연계
 - ※ 공공 자원을 지도기반 서비스로 검색·예약·결제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제공
 - 자원별 서비스별 운영관리 방안, 사고·분실 발생 시에 보험처리 규약 등 표준규정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자원의 개방·공유 촉진
 - ※ 자원공유 Open API 제공 등 공공자원의 활용 효과 극대화 및 새로운 민간비즈니스 모델 개발 촉진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공공부문의 다양한 유휴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개방·공유함으로써 공유경제 활성화 및 자원 활용 최적화 도모
 - ※ 국정과제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국정과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업예산 : 700백만원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 사업기간 : 6개월

□ 주요 사업 내용

-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 시스템 구축 타당성 및 방향성 도출
 - 공공부문 및 민간 자원·공유서비스 현황 조사·분석
 - 법·제도 현황조사 분석 및 자원공유 서비스를 위한 관리표준(규약) 마련
 -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시스템 구축·운영 추진체계 정립 등
 - * 공유자원 제공자, 공유자원(시설, 물품, 교육프로그램), 이용자 범위 정의
-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공공자원 현황조사·분석을 통한 주요 이슈 및 개선방향 도출
 - 자원관리 및 공유서비스를 위한 통합 자원공유 플랫폼 구축방안 수립
 - 공유자원 보유 지자체·기관 및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방안 수립
 - 시스템 구축 이행로드맵 수립 및 이행과제별 소요예산·일정 수립

□ 기대효과

- (대국민 편의향상) 공공자원의 공유서비스 채널 일원화 및 통합화
- (공유경제 활성화) 유휴 공공자원 공유·활용에 대한 공무원 및 국민의 인식 개선으로 다양한 관련 공유서비스 지속개발 등 공유경제 활성화 도모
- (서비스 범위 지속적 확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공유서비스 지속적 확대 및 새로운 자원공유 서비스 도출

□ 장비(HW/SW)도입 (예정) 내역 : 해당없음

□ 예산 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700	0	0	700	-	-

※ '19년 이후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